

광주 전남 대학 졸업생, 3명중 2명 수도권행

위기의 지역대학 활로찾기 <1>

수도권-지방대학 입시 양극화
청년층 이탈, 지역 악순환 고리
“양질 일자리 제공으로 해결해야”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권 대학의 입지도 크게 줄면서 대학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신입생들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결과에서도 서울·경인권과 광주·전남 간 경쟁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인구 유출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들이 광주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광주보건대를 시작으로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29일 종로학원이 전국 194개 대학의 최근 5년간(2021~2025학년도) 경쟁률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74대, 경인권 12.99대 1, 지방권 5.9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광주 서영대 문화복지관 앞에서 A미래자동차와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서울 대학 경쟁률은 2021학년도 14.67대 1, 2022학년도 16.01대 1, 2023학년도 16.85대 1, 2024학년도 17.79대 1, 2025학년도 18.74대 1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권 경쟁률은 5.71대 1, 6.10대 1, 5.80대 1, 5.53대 1, 5.99대 1 등 5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광주는 올해 5.38대 1, 전남 4.17대 1의 경쟁

률을 기록,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년 반복되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사실상 미달’ 상황과 서울-지역 대학 간 양극화 격차가 커지면서 지방대 폐교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진학 후 졸업을 하더라도 관내에서 구직 활동 및 취업을 하지 않고 서울·수도권을 비

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수도 졸업자 수 중 2/3에 육박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지역 대학 졸업자 중 취업이 확인된 7만2518명 중 2만5739명(35.5%)만이 대학소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4만9759명 중 1만9695명

(39.6%)이 전남지역에서 취업했다. 광주·전남 모두 1/3을 겨우 넘기는 졸업자만 지역에 남은 셈이다.

이처럼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는 현상은 지역의 좁은 취업문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층을 붙들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저출산, 인력난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창욱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의 경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청년정책과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광주청년드림은행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지역에 잡아둘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다. 지역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시작으로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노력들이 필요한 때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공직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혐의 부인... 법적 공방 예고

박근혜 의원 관계자, 혐의 인정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현역의원들에 대한 선고 여부가 주목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박근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구속기소)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공모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와 A씨가 운영

하는 법인으로부터 430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 부터 선거구인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날 안 의원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와

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어질 재판에 30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재판부는 각 피고별로 증거 인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25일 오후 한 번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00여만원 가

량을 초과해 선거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관련 기본적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과정에서 초과사용한 선거비용의 액수가 명확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B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로 선출직의 당선 무효가 된다.

민현기 기자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